



이주여성들의 전통음식 만들기

민족의 명절인 설을 엿새 앞둔 8일 오전 광주시 북구 오치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전통음식체험에서 이주여성들이 한복을 곁에 차려입고 음식을 만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민자유치 무분별한 비판 안타깝다”

박광태 광주시장 돛구장 관련 기자회견

박광태 시장은 8일 '포스코건설 돛구장 제안 포기'에 따른 긴급기자회견의 상당부분을 '민자유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또 민자유치에 대한 지역 내 일부 부정적인 여론과 이와 관련한 무분별한 정치논리 확산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돛구장 건설이 무산 위기에 몰렸는데.

▲좋은 기회를 상실하게 된 점이 아쉽다. 이번 일을 계기로 민자유치에 대한 맹목적인 비판 문화가 사라졌으면 한다. 일각에서는 돛구장과 단지를 조성하면 구도심 공동화가 심해진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이다. 광주의 미래성장을 위해 도시의 성장 방안을 강구하면서 구도심은 공공재정 투입 등을 통해 살리는 것이 타당하다.

-돛구장 건설 추진 과정은.

▲새 야구장 건립은 공약사업이다. 꾸준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포스코건설 회장에 직접 전화해 돛구장 건설을 제안했다. 아무래도 절감을 생산하는 회사이니 원가를 절감할 수 있겠다고 봤다. 그 뒤 포스코건설에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 워터파크를 제안했고, 광주의 사정을

감안해 공동주택은 임대아파트로 해결 것을 요청하는 등 조율과정을 거쳤다.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할 당시 부대사업은 임대아파트 2천~3천 호 건립, 워터파크, 골프장 등이었다. 더 제안하라고 했으나, 결국 4천억 원에 이르는 돛구장 건설비용과 매년 운영비용 150억 원을 마련할 길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앞으로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광주의 특수성을 감안해 앞으로 광주시는 계획을 세우고,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구성된 민간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민자유치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무분별하게 반대 여론이 높았다는 점은, 앞으로 도시 발전에 상당한 장애가 될 것으로 본다. 여러 가지 지역 내 여건을 검토한 뒤 투자 의향을 밝힌 대기업이 구체적인 제안을 할 때까지는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사전에 공개할 것이 있고,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도, 여론 수렴만을 강조하면서 발목을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 원칙을 알고 지역 미래를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 또 돛구장을 정치적인 논리로 바라보는 시각은 지



역발전을 위해서도 자제돼야 한다.

-대구시에는 제안서를 냈는데.

▲돛구장은 건설비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2곳을 동시에 추진해야 장점이 있다. 오전에 대구시장과 통화했는데 상당히 고민하고 있더라.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에는 달리 대구시 1천200억 원 부담, 경제자유구역 아파트 3천 세대 설립 등이 조건이라고 한다.

-다른 대기업도 제안서를 낸다고 들었는데.

▲포스코건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대기업 컨소시엄이 제안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해와 공동 심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 그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민주 지방선거 공천방식 힘겨루기 왜?

전대·총선 겨냥한 주도권 다툼

당 주류-지역정치권 시민배심원제 도입 놓고 갈등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등 6월 지방선거 경선 방식을 둘러싸고 민주당 주류 세력과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의 미묘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광주시장 후보 경선과 관련해 시민배심원제 도입에 부정적인 반면, 주류세력은 적극적인 도입을 압박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런 갈등이 가깝게는 7월 전당대회, 멀게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주도권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부터 텃밭인 호남에서 세력을 확보해 국회의원 공천권 획득은 물론 당권·대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사전 포석이다.

◇시민배심원제 인식 차이=갈등의 배경에는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주류 측에서는 호남에서부터 시민배심원제 도입을 통한 개혁 공천을 실시한다면 국민적 흥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통합과 혁

신위력은 시민배심원제가 동원 경선을 근본적으로 차단, 민심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시민배심원제 도입에 유보적이거나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을 대표하는 후보를 위 부인사 100명과 지역 인사 100명이 선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당원 참여가 없고, 배심원단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므로 정당정치·책임정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광주시장 위원장인 김동철 의원은 8일 광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민공천배심원제가 광주시장 후보를 뽑기에 과연 적합한 제도인지 의문이고, 리스크도 많다"며 "개인적으로는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광주시장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광역의원 경선에 시민배심원제 도입을 하는 것

은 비용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당원 당규대로 당원 경선을 실시할 것"이라며 "구청장 경선은 운영위를 열어 충분히 토론할 것이지만, 대부분 국민참여경선으로 하되 중앙당에서 강력히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의 동의를 전제로 남구 등 1~2곳은 시민공천배심원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류 세력에 대한 불신감=광주·전남 일부 국회의원들은 당내 주류 측 인사들이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야권과의 통합과 연대 등을 지렛대 삼아 영향력 강화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야권 연대를 위해 호남지역에서 일부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등을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장 위원장인 김동철 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무책임한 정치공학적 접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일부 주류 측 인사들이 지방선거와 관련, 지나치게 나서고 있는 점도 지역 정치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광주 모 국회의원은 "일부 인사들이 당내 주류의 흥위병처럼 떠돌고 다니는 것은 민주당을 위해서 결코 좋지 않다"며 "경선 방법 등 민감한 문제일수록 사전 조율과 조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차기 당권 등 당내 역학구조=지역 정치권과 당내 주류 세력 간의 불화는 차기 당권과 대권 구도와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다. 오는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동영 의원이 복당하고 손학규 전 대표와 김근태 전 의원 등

도 정치 일선에 복귀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과 당내 주류 간의 미묘한 갈등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전남에서도 박주선 최고위원과 김효석 정책연구원장, 박지원 정책위의장 등이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권과 원내대표 등에 도전한다.

지역 정치권이 차기 당권 향방에 따른 19대 총선 공천 등을 염두에 두고 움직인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돛구장 무산 광주시 무리한 사업 추진 탓”

광주시장 예비후보들 비난...지방선거 쟁점화 시도

광주시장 예비후보 및 출마 예정자들이 저마다 '돛구장 무산' 관련해 8일 광주시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등 선거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정동태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광태 광주시장 이 포스코건설의 돛구장 포기를 광주 시민의 부정적인 여론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면서 "돛구장의 필요성에 대한 광주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야구장 설립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갑길 광산구청장은 "광주시가 지난 4개월여 동안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논란과 갈등만 양산하는 소모전이 벌어졌다"며 "시대의

흐름에 맞춘 참여와 소통의 새로운 리더십이 광주의 발전과 도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형일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돛구장 무산은 시민 사회와의 소통 없이 박 시장이 특정 기업만을 상대로 급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데서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면서 "늦게나마 박 시장이 시민위원회 구성 등 소통의 경로를 밟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논평했다.

진보신당 윤난실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박광태 광주시장은 정치적 책임 차원에서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투명한 시민 참여와 합리적인 행정을 통해 개방형 야구장을 체육공원과 함께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운태 의원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기업이 수익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돛구장 건립 문제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며 "광주시가 제3의 안을 내놓는다면 야구타운 조성 방안과 함께 시민여론 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새로운 야구장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돛구장 건설 문제는 새로운 시장이 취임한 후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는 돛 야구장 관련 사회적 낭비를 가져온 것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각계 전문가 20명 야구장 형태·시기·재원조달방안 결정

야구장 건립위원회는

광주시가 다음달 중 구성할 예정인 '광주 야구장 건립 시민위원회'는 건축·토목·도시계획 전문가, 야구 전문가, 시민단체, 학계·재계 추천 인사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야구장의 형태, 건립 시기, 재원조달방안 등 야구장 건립

과 관련된 전 부문을 광주시로부터 위임받아 결정하게 된다.

광주시는 이달 초 시민단체·학계·재계·언론계 관계자 등을 추천받아 공인회계사 등 15명으로 이뤄진 돛구장추진심의위원회를 구성, 포스코건설이 제안서를 접수하면 곧바로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위원회는 '돛구장 제안서' 검증을 위한

기구로, 야구장 건립 방안 전반을 기획·심의하기에는 알맞지 않다는 것이 광주시의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위원 선정에 있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기간 등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공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이건 그냥 복분자가 아니며 내 자식이여

세계에서 가장 좋은 복분자를 길러주시는 농민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100% 우리 복분자로만 만듭니다

보해복분자